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과 한반도 전략의 현황과 과제

전재성


EAI · 서울대학교

2014년 7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로 발전하여
평화로운 국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4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ISBN 978-89-92395-87-8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과 한반도 전략의 현황과 과제

전재성

EAI, 서울대학교

I. 서론

이 글은 변화하는 2010년대의 미중관계, 더 크게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정부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적 구상을 토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전략이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특히 1970년대 초반 미중 관계가 소위 데탕트를 기점으로 급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빠르게 변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과연 현재의 한국이 어떠한 함의를 추출할 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은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상대적 쇠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진다. 세력균형의 변화와 더불어 양국은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은 소위 아시아 중시전략을 2010년 전후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강대국 전략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중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소위 신형대국관계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그간 미중이 각각 추구해온 지역전략의 공통점을 찾아 일정 기간 동안 협력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협력 상태 속에서 경쟁은 지속될 것이고, 미중 두 강대국의 협력 속 경쟁은 주변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Shambaugh 2013). 과연 미중 신형대국관계가 주변국들의 대강대국 정책에서도 신형관계로 나타날지, 그리고 주변국들 간의 관계도 신형관계로 귀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Campbell 2013).

대표적인 대상이 한반도다. 미중이 신형대국관계 속에 협력관계를 추진할 때 각각의 동맹국인 한국과 북한도 신형남북관계를 설립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데탕트의 시기를 보면 미중은 상호협력 관계를 수립하면서 남과 북이 소위 미니데탕트를 추진하도록 독려했던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에 걸친 남북 화해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불과 3년이 채 안되어 남북 간에는 다시 대결과 경쟁관계가 복구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강대국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질서라 하더라도 강대국들 간의 관계 설정이 주변국들 간의 관계에 직접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거꾸로 따져보면 강대국들의 관계 개선이 주변국들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역시 나름대로의 독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은 북핵 문제, 더 나아가 북한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 북한 문제는 탈냉전초기, 9.11테러 발생 이후 반테러 전쟁기를 거치면서 그 환경이 변화되었다. 향후에는 미중의 동아시아 세력경쟁 구도 속에서 새롭게 문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북핵과 북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미중 관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전략과 대북전략을 선순환



구조로 엮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동아시아 정책을 살펴보고, 미중 관계의 변화가 어떠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책 제언의 관점에서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 현황과 과제

1.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전개

현재 동아시아는 전반적인 세력균형 변화와 더불어 국가중심의 근대 국가체제가 복잡화되는 소위 탈베스트팔리아, 혹은 탈근대 이행을 동시에 겪고 있다. 냉전 종식 유지되어 오던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미국이 반테러전쟁과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이어 상대적 쇠퇴, 혹은 전략적 축소(retrenchment)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Brooks, et al. 2012; Beckely 2011). 반면 중국은 9% 전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고,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으로 두드러진 둔화 없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간 누려왔던 지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기술 부문의 뛰어난 선도성과 외교적 지도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Drezner 2013, 52-79). 반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려면 일정 기간 지체현상이 벌어질 것이다(Johnston 2013; Schweller and Pu 2011).

미중 간의 세력균형 변화는 전략의 변화로 이어져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중국의 강대국 전략이 본격적으로 교섭하게 만든다. 현재 수립된 신형대국관계 및 그 유지국면은 미국으로서는 패권부활에 필요한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전략공간을 마련하고 중국으로서는 강대국 부상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환경 조성 및 소강사회 건설을 통한 국내기반 강화의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이 향후 경제력 회복을 통해 다시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할지, 중국이 소강사회 건설 이후 탈소강패권국의 지위에 오를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두 강대국의 세력균형 변화 이외에도 동아시아는 전반적인 국제질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수많은 FTA 조약 네트워크에서 보듯이 역내 무역량이 증가하고 생산네트워크가 촘촘해지는 등 역내경제통합이 가속화되었다. 민주화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시민사회네트워크도 성장했다. 또한 여러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국가들 간의 세력경쟁에 규범적 제약을 가하는 국제환경도 조성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 중심, 하드 파워 중심의 근대적 국제정치도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로 서서히 변화하려는 기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참여해져 가는 세력균형과 탈근대 이행의 거대 흐름 속에서 양자 모두에 적절히 대비하는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부분적으로 시도했으나 이들이 통합된 전략으로 구체화된 경우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2.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지역전략과 과제

박근혜 정부가 현재까지 제시해온 동북아 지역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주변 강대국에 대한 양자 전략 내용은 있지만 전체 지역전략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및 다각화,



일본에 대한 원칙 중시 외교, 그리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을 지역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전략들이 미중 신형대국관계 수립이라는 양자적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지역적 변화를 민감하게 의식한 상태에서 제시된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명박 행정부로부터 이어온 포괄적 전략동맹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다지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얻는다는 것이었다(외교통상부 2013a). 한국과 미국은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재까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조건, 주한미군 분담금 배분, 원자력협정 개정,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에 관해 논의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3월 이후 병진전략을 추진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한미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미 간의 전략협이는 여전히 명확한 개념과 비전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전략과 미중 신형대국관계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 중시전략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 개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의 동맹국 관계 강화를 전략의 핵심에 두고 있다. 아시아 중시전략이 대중전략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중관계를 어떻게 유지해나갈지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지대하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미중 신형대국관계는 양립이 가능하다. 미국은 중국과 상호협력관계 심화를 유지하면서 리더십 부활에 필요한 경제, 외교적 힘을 축적하고자 한다. 신형대국관계는 미국에게 이러한 노력의 시간을 벌여줄 수 있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중시전략에서 한국은 어떠한 대미관계를 수립해야 하는지 점차 입장을 정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이 계획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한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질서 간의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 과연 한국이 명확한 지역질서 구상을 가지고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미 간에는 중국을 포함한 지역전략 구상 협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1972년과 명확히 비교된다. 데탕트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대만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협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약화시키고, 남북 간의 화해를 독려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지역전략을 염두에 두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 협상 권고를 받아들여 <7.4 남북공동성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노선에 대응하는 군사, 경제 전략을 추구하는 전략적 노련함을 보인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다가오는 미래의 미중 경쟁관계를 의식하면서 당분간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미중 간의 민감한 전략관계를 의식하고 한미동맹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대중 전략으로 한국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체된 한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노력 강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원 요구, 국가안보실 차원의 전략협의 강화, 한중 FTA의 조속한 추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외교통상부 2013b).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북핵 문제, 더 나아가 북한의 미래는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효율성을 실험하는 선도적 이슈로 논의된 바 있다. 중국은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기존과는 달리 국제연합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핵개발이 가져오는 중국 국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와 강대국으로서 동맹국을 통제하지 못하는 위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중 간의 구조적 협력 필요성 속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이슈로 북한의 비핵화를 상정한 이상 한국은 북핵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72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데탕트 시기에는 한국이 중국과 직접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관해 한중 간 전략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한국은 미국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어떠한 압력을 넣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반면 지금은 변화하는 미중관계를 인식하면서 중국과 직접 전략협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본격적인 강대국 외교를 추진하려고 한다. 강대국 외교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보편규범을 준수하고 강화하는 중국의 위신을 제고하는 외교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강대국 외교를 염두에 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과의 전략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미중 간의 신형대국관계 수립 및 양국의 전략적 관계 변화를 인식한 전략인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동아시아 중견국으로서 지역 안보와 경제 아키텍처 구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은 과거, 특히 데탕트 시기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점이다. 냉전 당시 한국은 지역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북아 다자안보구상을 제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이상현 2010). 그러나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지역적 차원과 한반도 차원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추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아시아 역내 경제상호의존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협력이 부재하다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실현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기능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정학적 민감성이 낮은 기능적 이슈로부터 협력을 강화하여 신뢰를 쌓고 이후 지정학적 협력으로 이행해 가자는 선이후난의 기능적 협력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가능한 분야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고, 안보 등 다른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이 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밝히고 있다(박근혜 2013a).

또한 구체적 실행계획에 관해 “핵안전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사이버협력, 자금세탁 방지 등 연성이슈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을 축적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 저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먼저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공유하지 않으면 작은 차이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같으면 그 차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동북아는 활짝 열린 개방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만의 리그가 아니며 세계 속의 동북아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와 함께 땀 흘리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동북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북아가 지속 성장해나가는 비결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바와 같이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일이 이 지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박근혜 2013b).

동아시아의 많은 이슈들이 기능적 협력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 분야의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능적 협력이 지정학적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형대국관계가 설정되면서 사이버 안보와 같이 양국이 공통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능적 이슈에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강대국 간의 기능적 협력이 점차 확대되면 민감한 안보이슈에 대한 협력이 제고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전형적인 근대 세력균형 전략을 넘어서고자 하는 변환전략의 측면을 담고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문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또 한 축인 강대국 간 세력균형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지역전략 부분이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많은 기능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려면 미중이 전개하는 동아시아 아키텍처를 둘러싼 경쟁을 민감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점점 많은 기능적 이슈들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기 때문에 미중 경쟁관계를 탈각한 순수 기능적 이슈를 찾아 가는 것만으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지역전략이 되기 어렵고, 민감한 안보이슈 자체에 관해서도 지역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지역다자주의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환경에 처한 것은 1972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데탕트 당시에는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구소련 간의 대립도 명확했다. 소련은 베트남전에 대한 간접지원을 하고,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소 간의 화해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이 다자주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이 발전된 국력으로 중견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다자구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간에 지속되고 있는 경쟁구도가 지역다자주의를 둘러싸고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넷째, 미중 경쟁관계의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강대국인 일본과 러시아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전략과 결합하여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의 헌법적 해석을 변경하고,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초 데탕트 국면에서도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발하면서까지 대중 접근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지역적 구도를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당시 데탕트의 종속변수에 불과했던 남북한의 외교정책 범주와는 차별되는 행보였다. 지금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미중 신형대국관계와 더불어 전개되는 미국의 대중 군사경제 필요성에 적극 호응하면서 보통국가화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적극적 외교로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이에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이 영향력을 더욱 얻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역시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한편으로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극동 내 자국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동아시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제공 및 극동 공동개발 등의 경제이슈를 통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북한을 둘러싼 가스관 공동개발 사업 및 북한에 대한 공동투자 계획 등을 추진하며 한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역시 변화하는 미중관계를 지켜보면서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가 시작한 소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러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2008년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해 추진해 온 북러 합작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기업 참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한러 공동성명 최종 합의문을 보면, “양측은 러시아 철도 공사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시범사업인 나진(북한)-하산(러시아) 구간 철도 복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나진항 제3부두의 현대화를 환영”하는 한편, “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유라시아의 협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여건의 조속한 조성, 특히 지역 안정 강화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제협력이 장차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미래에 관련된 전략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외교통상부 2013c).

한국은 미중 간의 세력균형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주변 강대국들의 변화 또한 정확히 인식하여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역구도를 제시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이 바라는 지역구도 내 역할과 지위를 제시하고, 올바른 구조적 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우경화 및 군사적 강대화 견제의 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강대국 외교가 뒷받침될 때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소위 신뢰외교를 통해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라는 추상적 원칙이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를 반영하고 수립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III. 대북 전략의 현황과 과제

1.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원칙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10년 간의 진보정권 대북 정책과 지난 5년 간의 보수 정권 대북 정책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노정한 후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제시되었다. 남과 북이 뿌리 깊은 안보 딜레마와 불신구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 개념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립, 억제력에 기반한 다각화된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확실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박근혜 2013c).

또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뢰프로세스에 관해서는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고,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박근혜 2013d).

결국 신뢰프로세스는 기존 대북정책의 포괄적 경험을 토대로 수립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대북정책의 교훈과 실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 및 균형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대북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거 정책들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적 정책을 추구하려고 한다(박인휘 2013). 균형정책의 핵심 요인으로는 ‘남북 중심적 접근’과 ‘국제 공조적 접근’ 사이의 조정과 균형, 그리고 ‘안보 중심적 접근’과 ‘교류협력 중심적 접근’ 사이의 조정과 균형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ark, Geun-hye 2011).



2. 신뢰프로세스의 보완 필요성

이러한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에 관해 몇 가지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미중관계 간의 관계 설정의 문제이다. 북핵 문제 및 북한 문제는 주변국, 특히 미중의 국가이익과 연결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과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미, 대중 정상외교를 위시한 양자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미중 양국으로부터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총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면서 주변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북한의 비핵화, 더 나아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낸다는 기조는 주변국으로서도 수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나 대북 정책의 성공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 및 중국의 강대국 전략과 어떻게 선순환관계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신뢰프로세스의 실현가능성으로서,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억제에 필요한 제반 조치 추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협력까지는 성과를 거두었고 한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었으나,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5.24 조치 변경 및 향후 남북 경협 추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신뢰프로세스에 의하면 북한의 약속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그간의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궁극적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미중 양국 역시 한국이 주도하는 신뢰프로세스가 원칙주의에 머물러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뢰프로세스를 원칙상 지지하더라도 정책효과성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 한국의 지역전략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간의 연결가능성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은 복합전략으로 미중 간 세력균형 갈등에 대비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질서 변환전략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대미, 대중의 양자전략은 표명한 바 있지만, 한미중 삼각관계 전략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은 북한의 미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양상이 향후 한반도의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며 UN 제재에 참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넘어 북한 정권의 불안정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통일 한반도의 외교적 지향이 친미적으로 경도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사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하며 통일 기반 강화를 논의했지만,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한반도의 지역 비전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주변국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박근혜 201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 고려를 감안할 때, 한국이 미래 한반도의 외교적 지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중국의 대북 전략은 전술적 변화의 모습을 띠는 순 있어도 전략적으로 변화되기는 어렵다. 중국이 북핵 문제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여 비핵화는 물론, 상황에 따라 북한의 정권불안정성을 야기하더라도 한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도모할 수 있다면 대북 제재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데탕트 시기 남북관계가 표면적으로는 미중의 독려로 화해관계를 보이기도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적대관계를 지속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베트남 공산화 통일을 목전에 두고 데탕트 국면을 대남 공산화 통일을 위한 전술적 단계로 간주한 것이 70년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북한의 대내, 남북, 국제차원의 3대 혁명역량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정치경제체제 강화, 대북 군사태세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3중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전략적



목적은 변화하지 않는 한, 강대국의 관계 변화에서 야기되는 상황적 변화로는 단지 전술적 변화만 일으킬 수 있다는 보여준 전례이다.

지금도 남과 북은 자신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정한 화해 협력과 공존을 위한 변화의 길에 나서고 있지 않다.¹ 특히 북한은 병진전략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가운데 개혁이 아닌 개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부분적 개방만을 추구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미중 관계가 신형대국관계 속에서 협력관계로 발전하더라도 남과 북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결구도를 지속하는 한, 남북 신형대국관계가 초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교정상화는 물론 심화된 경제관계의 토대 위에서 향후 동아시아 질서를 둘러싼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데탕트기에는 엄격한 양대 진영 논리로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중 간에 전략적 의견을 교환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한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은 이제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를 둘러싼 전략적 협의를 통해 현재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북핵과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전략적 사고를 온전히 이해하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미중 경쟁관계가 전개되는 하나의 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중 관계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중국에 제시하지 않고서는 북핵 문제라는 미시적 문제에서도 전략협력을 이룩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대중 외교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시적 전략협의를 하고 있으나, 향후 한미중 삼각관계, 더 나아가 지역협력을 둘러싼 전략협의를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와 병행하여 한미동맹의 미래 기능, 한일 전략 협력 가능성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바, 한국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전폭적 협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한국이 북한에 비해 국력과 외교력 측면에서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데탕트 시기에는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시기로 북한의 대남 공세 및 적화통일을 막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매우 변화되어 한국이 우월한 위치에서 북한을 억제함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제 내지는 한미군사협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및 체제, 정권 차원에서 현재 자신들의 시스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존재할 때이다. 따라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비핵화된 상황에서 정권과 체제, 국가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유인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핵을 보유한다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위협으로 인식되도록 하기에는 여전히 정책수단이 부족하다. UN을 통한 경제제재와 양자적 경제제재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은 정권유지에 대한 불안감은커녕 병진전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핵포기 이후 북한의 체제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남북 경협을 통한 대북 지원, 그리고 국제적 대북 원조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 회복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각 구성요소들, 즉 정치체제, 경제체제, 안보체제, 사회문화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Charles and Levin 2008). 과거 구 공산권 국가들의 이행을 보더라도 단순한 경제체제의 이행만으로는 온전한 정상국가화 사례가 드물다. 경제개혁을 통한 정치개혁과 연결되어 기존 정권들이 정치권력을 상실한 바가 많다. 경제개혁은 그간 경제적 특권을



누려왔던 지배연합을 약화시켜 정치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은 주민들의 경제적 복지와는 유리된 채, 지배층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해왔고,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정치적 가산그룹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경제개혁은 기존의 정치지배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경제개혁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배층 내의 주도세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개혁과정에서 부담을 전가 받아 개혁에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비용이 추구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조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김진하 2012).

따라서 한국의 경우 단순히 북한의 정권교체나 막연한 통일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북한의 체제이행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체제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제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서서히 정치체제가 변화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안보체제에 변화가 일어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보기에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체제이행 프로그램을 한국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진실성을 확인해야 비핵화를 포함한 정상국가화의 궤도에 들어설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김태환 2010; 한병진 2010).

한국의 신뢰프로세스는 유인책 제공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매우 추상적이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관여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한반도”나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한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언명할 뿐이다(박근혜 2013a).

그 내용은 대부분 경험과 원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의 경우 원조가 대규모로 유입되어 경제체제가 시장중심으로 이행할 경우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딜레마를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경제관여는 북한의 정권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전략으로 오인받을 가능성도 있다. 과거 진보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최종상태를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컸다. 북한을 포용하여 결국 북한을 흡수통일할 것이라는 불안을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북한의 체제이행에 대한 보다 완전한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이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를 더욱 구체화하여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IV. 향후 전략 방향

2014년 현재 동아시아는 국제정치적 대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지구적 리더십 회복을 추구하고, 중국은 강화된 시진핑 체제를 통해 본격적인 강대국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중 양국 간에는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이루었지만 미래의 본격적 경쟁을 위해 중국 주변의 전략 공간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전략적 방향 설정에 부심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노선을 확실히 하고 미국의 재균형 전략 파트너로서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군사적 보통국가화, 혹은 대국화의 에너지를



우경화에서 얻으며 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중견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역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적절히 견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부심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미국, 중국 등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신뢰외교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양자 관계를 위한 신뢰구축 및 전략적 협의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향후 다가오는 동아시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지역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 통일, 강대국 경쟁 속에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최대한 강대국들, 특히 미중 간의 충돌을 막고,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다자 협력을 추구해야 할 전략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과 평화를 위한 지역 구도 및 비전을 생산하여 강대국들을 설득하는 중견국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은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했지만, 안보 등 고위 정치 영역에서의 협력과 강대국 정치를 평화로 이끄는 이슈 영역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전략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전향적 행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추진한다는 기조와 원칙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원칙을 어떠한 로드맵과 전략 하에서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통일에 대한 대비론이 강화되면서 대북 정책 전개 과정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내부 불안정성 강화가 급변사태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급변사태가 통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현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북 태세를 약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북한 내 지배 연합이 약화되고 점차 취약해지는 북한 내 경제 상황 속에서 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체제 전반에 균열이 생길 중장기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북한 스스로 개혁과 개방, 남북 간 신뢰구축을 향한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는 대북 전략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다각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의 외교적 지향, 특히 통일 이후 한반도의 지역 비전을 명확히 할 때,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한국이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재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주(註)

¹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전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남긴 언론 인터뷰 기사는 시사점이 있다. 즉,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고 다른 주변국들과도 논의해야 한다. 중국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고 러시아도 그것이 동북 시베리아 개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말은 못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목표는 평화적 통일이다.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핵문제 해결의 종착점이다”라는 언명이다 (<동아일보> 2013/02/16).



참고문헌

- 김진하. 2012.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 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2-20.
- 김태환. 2010. “탈사회주의 권위주의 정권의 개혁저항: 이론적 논의와 유형 분류.” <세계정치> 31, 1: 119-158.
- <동아일보>. 2013.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韓中 정상, 한반도 통일논의 이미 시작...中 우려 풀어줘야.”” 2 월 16 일.
- 박근혜. 2013a. “제 68 주년 광복절 경축사.” 8 월 15 일.
- _____. 2013b. “국립외교원 50 주년 기념 글로벌 컨퍼런스 축사.” 11 월 14 일.
- _____. 2013c. “대통령 취임사-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 월 25 일.
- _____. 2013d. “제 94 주년 3·1 절 기념식.” 3 월 1 일.
- _____. 2014.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질의응답.” 1 월 6 일.
- 박인휘. 2013. “갈등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와 도전.” <평화재단 전문가포럼> 발표, 3 월 19 일. 서울.
- 외교통상부. 2013a. <한·미 동맹 60 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5 월 7 일.
- _____. 2013b.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 6 월 27 일.
- _____. 2013c. <2013 년 한·러 공동성명 최종 합의문>. 11 월 13 일.
- 이상현. 2010. “아시아관 NATO 구상의 좌절: 60 년대 박정희 정권의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 구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 5: 37-60.
- 한병진. 2010.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정치경제와 비교정치.” <세계정치> 31, 1: 79-118.
- Beckley, Michael. 2011. “China’s Century?: Why American’s Edge Will Endure.” *International Security* 36, 3: 41-78.
- Brooks, Stephen G., G. John Ikenberry, and William C. Wohlforth. 2012.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37, 3: 7-51.
- Campbell, Caitlin and Craig Murray. 2013. “China seeks a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Backgrounder, released June 25, 2013.
- Drezner, Daniel W. 2013. “Military Primacy Doesn’t Pay (Nearly As Much As You Think).” *International Security* 38, 1: 52-79.
- Johnston, Alastair I. 2013.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37, 4: 7-48.
- Park, Geun-hye. 2011.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90, 5: 13-18.
- Schweller, Randall L. and Xiaoyu Pu. 2011. “After Unipolarity: China’s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an Era of U.S. Decline.” *International Security* 36, 1: 41-72.



- Shambaugh, David. 2013.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Wolf, Charles and Norman D. Levin. 2008. *Modernizing North Korean System: Objectives, Method and Application*. Washington D.C.: RAND Corporation.



필자약력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 재단(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으로부터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와 한국외교”(East Asia’s Chang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연구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 본 보고서는 EAI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유재승 외교안보연구팀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jryu01@eai.or.kr

